

여성가족부 주요정책 수요조사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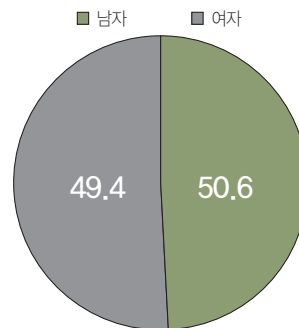
-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수요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 중인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중요도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추진전략단에서는 2016. 11. 10 ~ 11. 30에 걸쳐 전국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2,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1〉 여성정책 수요조사 문항구성 개요

대분류	세부항목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인지도, 정책 평가, 중요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 -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 -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일·가정 양립 정책	[인지도, 정책 평가, 중요도] - 유연근무제 - 모성보호 - 돌봄지원
경력유지 지원 정책	- 생애주기별 가장 시급한 정책
정책 실효성 확보	- 실효성 확대 방안
일반적 사항	- 연령, 학력, 성별 - 경제활동유무 및 유형 - 평균소득 - 결혼 및 자녀유무 - 거주지

- 본 조사는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비례 할당에 따라 무작위 추출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실시됨.
- 조사 문항은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이중 가장 핵심인 '일·가정 양립'정책, 경력유지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과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함.
-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49.4%, 남자가 50.6%로 비슷하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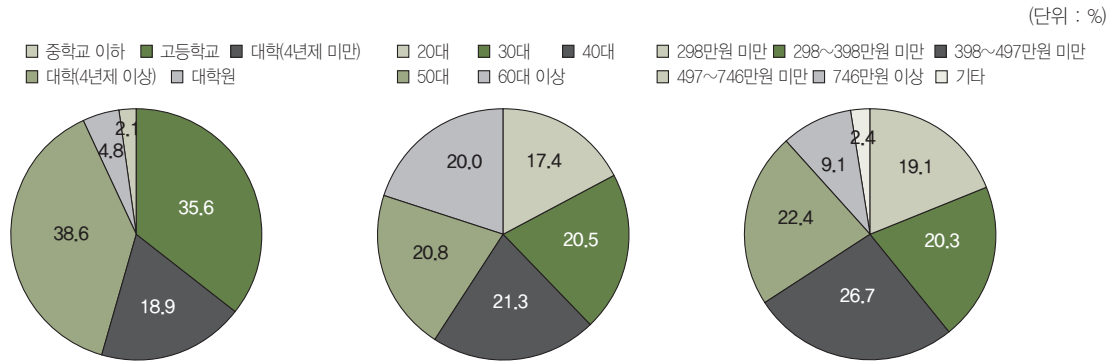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1] 여성정책 수요조사 조사대상자 성별 비율



-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4년제 대학이상이 38.6%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초대졸의 순서로 구성됨.
- 전체의 57.5%가 대학졸업자로 높은 비중을 구성됨. 연령별 구성비는 20대를 제외하고 20% 정도씩 고루 분포됨.
-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 400만원 정도가 26.7%로 큰 비중을 보였으며, 298만원 미만만 9.1%로 낮게 나타남.



[그림 2] 여성정책 수요조사 조사대상자 학력, 연령, 소득

II.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 평가 결과

-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됨.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이나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지원, 여성인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함.
-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는 가족지원 서비스나 청소년과 한부모,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작은 결혼식에 대해 질문함.
-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는 1인 가구 지원과 성매매와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구성함.
-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 강화'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성별로 살펴봐도 동일하게 나타남. 반면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부문은 여성의 경우 '작은 결혼식 활성화(33.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도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35.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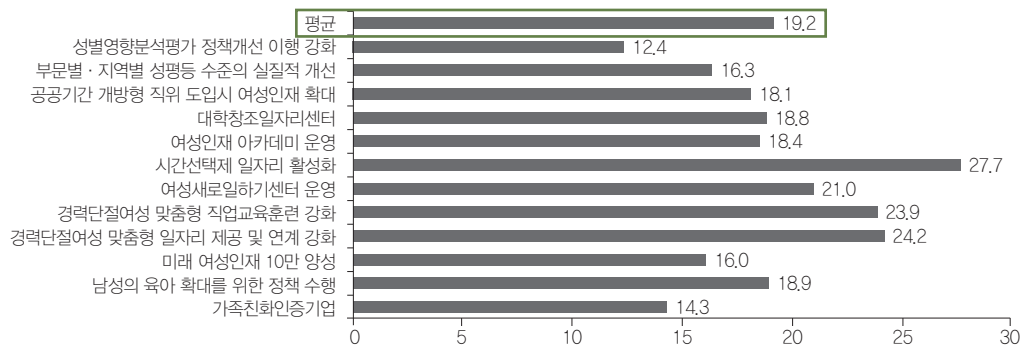
〈표 2〉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평가 : 성별

	인지도		정책평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39.9%)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39.6%)	작은 결혼식 활성화 (33.1%)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35.7%)
2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38.8%)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39.1%)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28.7%)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31.4%)
3	성매매 예방 및 교육, 피해자 보호 강화 (38.5%)	성매매 예방 및 교육, 피해자 보호 강화 (36.3%)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27.1%)	작은 결혼식 활성화 (30.4%)

이슈#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평가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해 전반적인 인지도에선 19.2%가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답함. 전반적인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27.7%)'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연계 강화(24.2%)'의 순서로 나타남.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연계 강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의 상위 3가지 정책은 모두 경력단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파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가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됨.
- 이외에도 주목할 부분은 '가족친화인증기업'임. '가족친화인증¹⁾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해 추진되는 정책임. 2016년 최다 신청으로 총 625개사(대기업 52, 중소기업 408, 공공기관 165)가 인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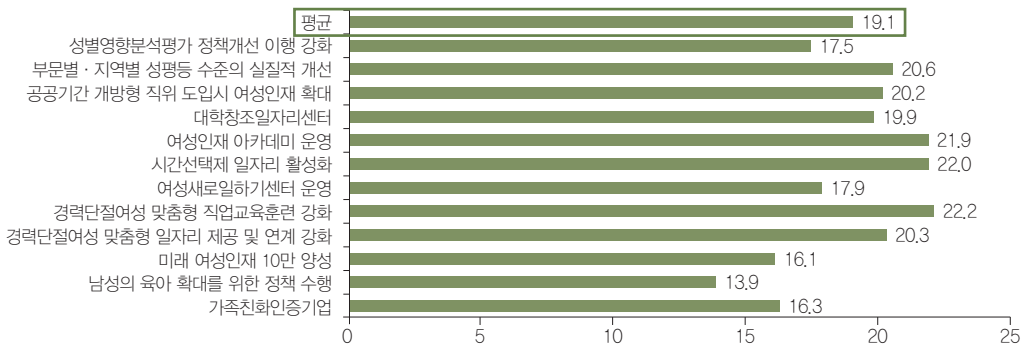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에 대한 인지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한 정책평가는 평균 19.1%로 높지 않음.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강화(22.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22.0%)' 순으로 정책을 평가함.
- 인지도와 정책평가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정책이외에도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이나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과 같은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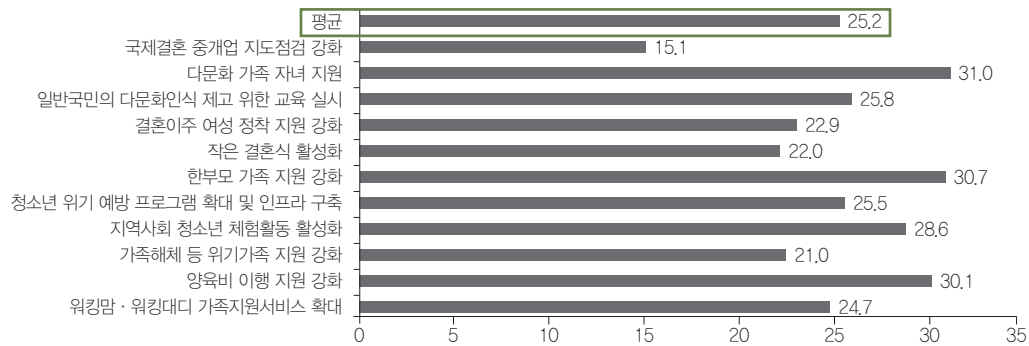
[그림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평가

1) '가족친화인증제'는 핵심개혁과제인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정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

이슈#2.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평가

-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에선 25.2%가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답함. 전반적인 인지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보다 높은 수준임.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31.0%)' 과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30.7%)'의 순서로 나타남.
- 다양한 가족에의 지원에 대한 부분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이외에도 주목할 부분은 '작은 결혼식 활성화'임. 최근 여성가족부는 '작은결혼 가이드북' 제작·배포, 공공시설 예식장 중 '으뜸명소'를 발굴, 제시한 바 있음. 관련 정보는 '작은결혼정보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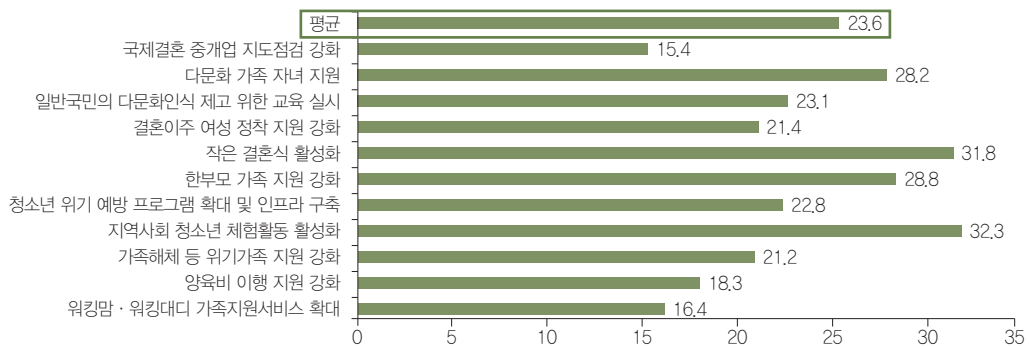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5]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

-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에 대한 정책평가는 평균 23.6%로 높지 않음.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32.3%)', '작은 결혼식 활성화(31.8%)' 순으로 정책을 평가함.
-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는 직업체험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실행중인 각종 사업임을 말함. 최근 교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계사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작은 결혼식 활성화'는 여성가족부 중심 비정상적 정상화 과제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정책으로 관련 정책의 홍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긍정적 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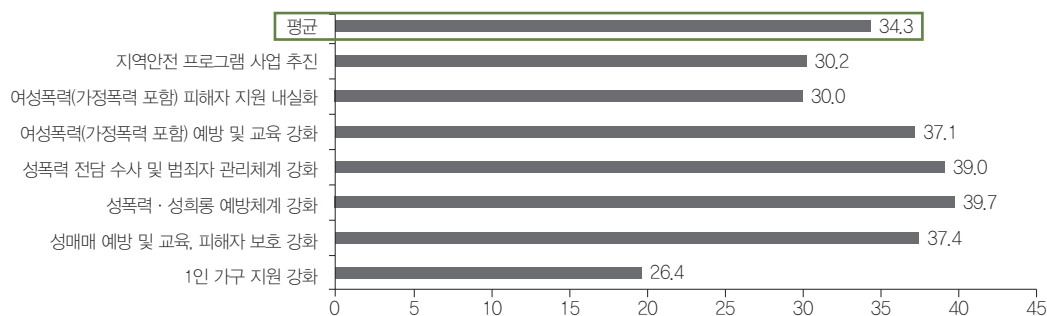


[그림 6]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에 대한 정책평가

이슈#3. '아동 ·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평가

- '아동 ·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34.3%로 분야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성폭력 ·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39.7%)'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39.0%)'로 나타남.
- '성폭력 ·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는 대학과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16.5.29 개정)을 통해 강화됨. 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성폭력 예방조치의 기본방향,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 계획'도 수립해야 함.
- 올 9월 30일, 상담소 ·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폐업 후 입소 ·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폐업신고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개정함.
- 최근 가구구성 비율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 지원 강화'가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세제 등 관련 연구와 사업이 증가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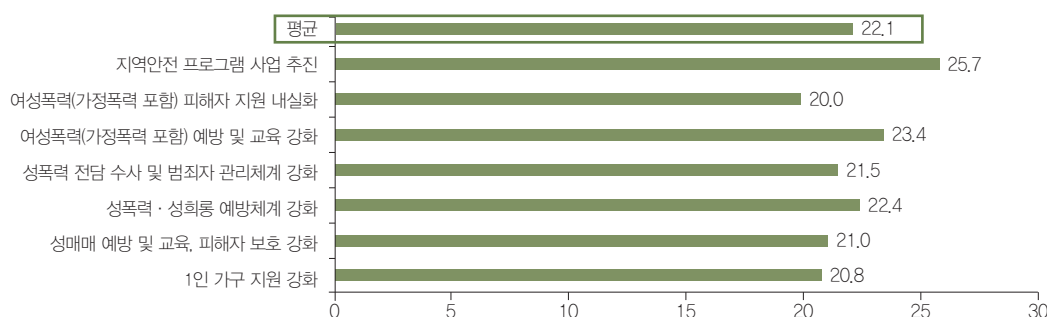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7] 아동 ·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

- '아동 ·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정책평가는 평균 22.1%가 긍정으로 평가했으며 '지역안전 프로그램 사업 추진(25.7%)'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여성폭력(가정폭력 포함) 예방 및 교육 강화(23.4%)'로 나타남.
- '지역안전 프로그램 사업 추진'은 아동 · 여성안전지역 연대 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각종 활동 등을 말함.
- '여성폭력(가정폭력 포함) 예방 및 교육 강화'는 점차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성폭력 · 성희롱 예방 체계 강화'는 피해자 지원 지원시설 확충 될 예정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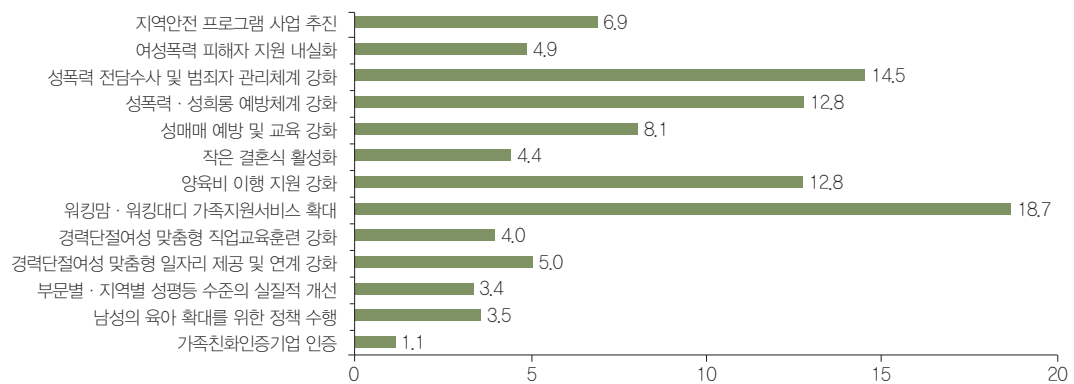


[그림 8] 아동 ·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정책평가

이슈#4.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도

-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7.7%가 중요하다고 평가함. 이 중 '워킹맘·워킹대디 가족지원서비스 확대'가 18.7%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음. 다음으로는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14.5%)'며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와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가 12.8%로 나타남.
- '워킹맘·워킹대디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정책에 따라 산전후 및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 육아휴직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전년 대비 51.6% 증가함. 전체 육아휴직자의 7.4% 돌파(전년 대비 2.3%p 증가)함.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45,217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7.4%를 돌파하여, 전년 동기 5.1%였던 것에 비교하면 2.3%p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는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확대 될 예정임.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인 경우 '17.12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향후 더 확대될 예정임.

(단위 : %)



[그림 9]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도

-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성폭력,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를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워킹맘·워킹대디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사업은 30·40·60대 이상에서 중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음. 반면 50대는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로 나타나 각 정책에 따른 중요도 평가의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음.
- 2순위로 보면 20·30대는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40대는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50대는 '워킹맘·워킹대디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60대 이상에서는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로 평가함.

〈표 3〉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도 : 연령별

(단위 : 명(%))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워킹맘·워킹대디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491 (18.7)	63 (13.8)	137 (25.4)	101 (18.0)	77 (14.1)	113 (21.6)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335 (12.8)	60 (13.1)	60 (11.1)	73 (13.0)	69 (12.7)	73 (13.9)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336 (12.8)	92 (20.1)	38 (7.1)	89 (15.9)	47 (8.6)	70 (13.4)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381 (14.5)	85 (18.6)	90 (16.7)	60 (10.7)	85 (15.6)	61 (11.6)

* 상위에 해당하는 항목만 재구성함.

Ⅲ. 일·가정 양립 정책

■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평가는 유연근무제, 모성보호, 돌봄지원으로 나누어 조사함.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와 스마트워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근무제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모성보호는 주로 휴가 및 근로시간, 돌봄 지원은 각종 정책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함.

■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산전후 휴가’로 나타남. 인지도와 정책평가 모두 성별로 살펴봐도 동일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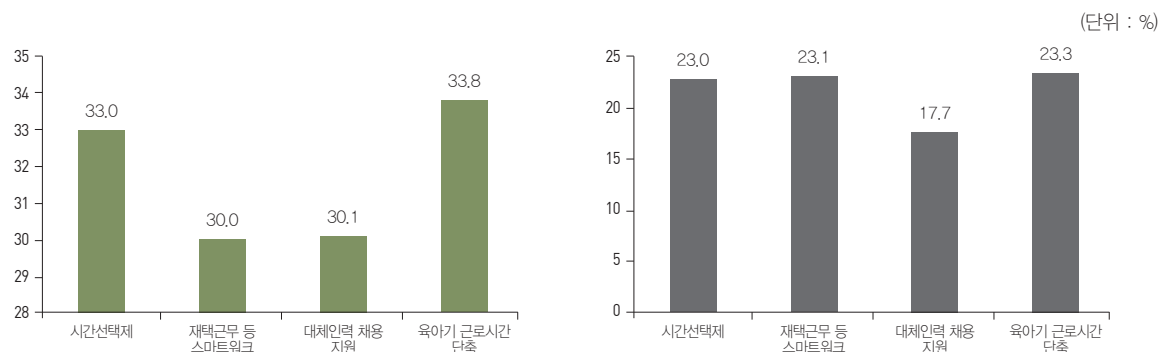
〈표 4〉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평가 : 성별

	인지도		정책평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	육아휴직 (58.6%)	육아휴직 (58%)	산전후 휴가 (32%)	육아휴직 (37.4%)
2	산전후 휴가 (53%)	산전후 휴가 (49.1%)	육아휴직 (31.9%)	산전후 휴가 (35.3%)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6.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6.3%)	초등돌봄교실 확대 (29.5%)	초등돌봄교실 확대 (34.4%)

이슈#1. 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3.7%)’이었으며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동일하게 나타남.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책인지도는 전반적으로 30% 정도로 나타나 낮은 편이라 보기 어려움. 단,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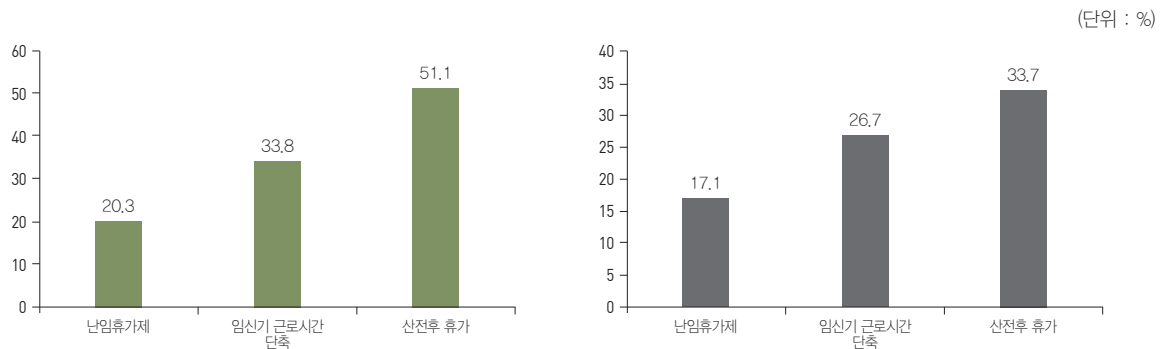
- 인지도가 정책평가보다 다소 높은 상황이며, 인지도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3.8%)’과 ‘시간선택제(33.3%)’ 순으로 나타남.
- 정책에 대한 평가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높았으며, ‘재택근무 등 스마트 워크’와 ‘시간선택제’ 순이었음.
 -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모델이 전파되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지원하고 있음. 또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을 확대하고 있음.
 -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선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재정지원 강화, 민관합동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근무시간과 장소를 조절·선택하여 일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그림 10]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평가

이슈#2. 모성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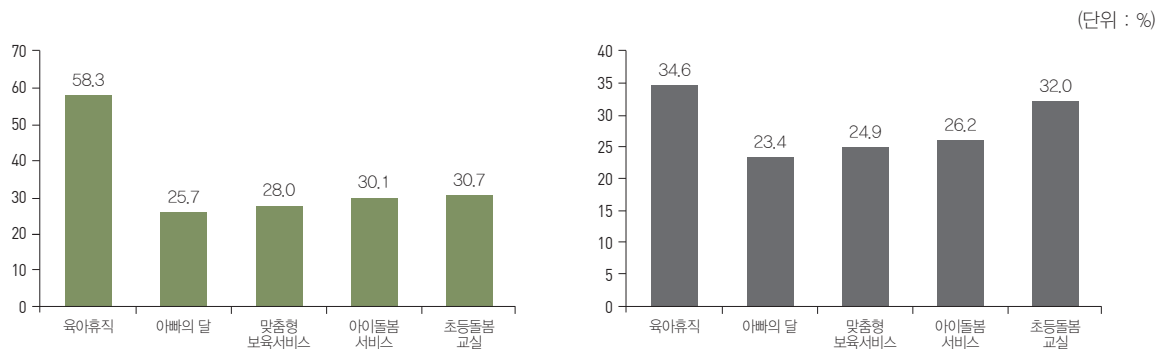
- 모성보호는 산전후 휴가에 대한 인지도가 조사대상의 과반수를 넘겨 높게 나타남. 정책에 대한 평가는 33.7%로 보임.
- 인지도 측면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모든 정책 중 '산전후휴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동일한 순서로 나타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하는 시간 선택제 전환지원금을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임신근로자는 우대 지원함에 따라 향후 제도 인지 비율은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됨.
- 모성보호제도 강화 및 홍보 확대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건강보험-고용보험 정보 연계²⁾를 통해 임신근로자와 그 기업에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실시('16.5월~)중임.



[그림 11] 모성보호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평가

이슈#3. 돌봄지원

- 돌봄은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가 58.3%로 조사대상자 전반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됨. 평가에 있어서도 육아휴직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돌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 서비스 순서로 나타났으며, 정책평가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남.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의 대표 사업인 '아빠의 달'은 인지도와 평가 모두 낮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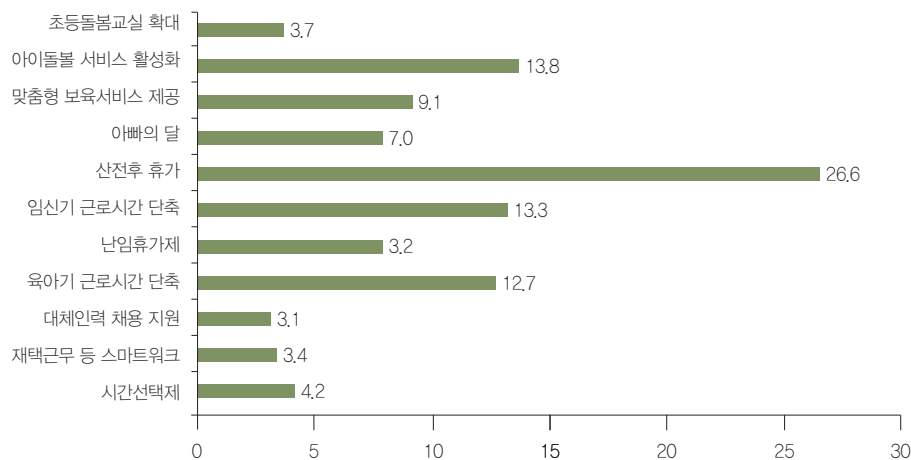
[그림 12] 돌봄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평가

2) 모든 임신부에게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정보와 고용보험의 근로자정보를 연계하여 얻어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법위반 사전 예방활동 및 사후 감독을 통한 임신·출산근로자 모성보호 강화함. 홍보는 임신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법적 권리 및 사업주 의무,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구성됨.

이슈#4. 정책에 대한 중요도

-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음. ‘산전후휴가’가 26.6%로 중요성에 있어선 가장 높은 것(26.6%)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다음으로 나타남.
- 일·가정 양립 정책 중 가장 며,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 정책은 ‘산전후휴가’로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산전후휴가’는
-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는 2017년 이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³⁾되며 맞벌이 등의 경우에도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최대 1년의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한 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임.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주당 15~30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임. 현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임.
- ‘아빠의 달’⁴⁾ 이용자 수는 2,046명으로 전년 동기(594명) 대비 3.4배 증가하였고, 남성의 활용 비율이 88.6% (1,809명)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단위 : %)



[그림 13]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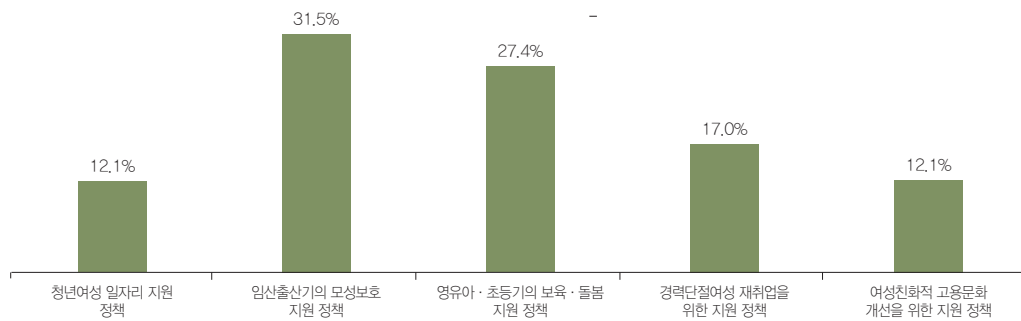
3)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됨.

4)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상한 150만원)하는 제도임.

IV. 경력유지 지원 정책

-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임산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 정책'이며, 다음으로는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로 나타남.
- 경력유지 지원 정책의 핵심은 장시간 근로와 이른바 눈치보기로 인한 제도 사용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가정 양립이 미흡한 국가로 과도한 일중심의 문화가 부정적 결과를 도출함. 특히 연간 근로시간이 34개국 중 3위(2,057시간)로 매우 높은 상황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직무소진(번아웃 증후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임산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상황이나 세부적인 정책적 지원에 대한 홍보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확대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임. 현재 150개소에서 향후 155개로 증가되며 교육과정도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훈련 과정이 확대될 예정임.

(단위 : %)



[그림 14]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 성별에 따라 경력유지 지원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해보면 남녀 모두 '임산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 정책'이며 두 번째로는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으로 나타남. 중요도는 성별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이 현행 만 3개월 ~ 만 1세(만24개월)에서 2017년 만 3개월 ~ 만 2세(만36개월)로 확대될 예정임.

〈표 5〉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 성별

(단위 : 명(%))

	전체	여성	남성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	317 (12.1)	151 (11.4)	166 (12.8)
임산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 정책	828 (31.5)	420 (31.6)	408 (31.5)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	718 (27.4)	361 (27.2)	357 (27.5)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	445 (17.0)	225 (16.9)	220 (17.0)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317 (12.1)	171 (12.9)	146 (11.3)

-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30대·50대·60대 이상의 경우 모두 ‘임산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 정책’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40대만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을 시급하다고 평가함. ‘임산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 정책’ 정책의 경우 관련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긍정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순위로 보면 20대·30대·50대·60대 이상의 경우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이었으며, 일순위에서와 반대로 40대에서는 ‘임산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 정책’이 2순위로 나타남.

〈표 6〉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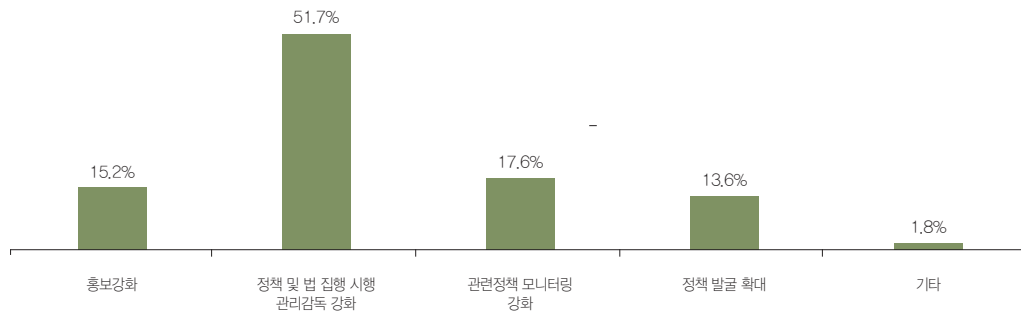
(단위 : 명(%))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	317 (12.1)	85 (18.6)	65 (12.1)	72 (12.9)	35 (6.4)	60 (11.5)
임산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 정책	828 (31.5)	157 (34.4)	165 (60.6)	144 (25.7)	173 (31.7)	189 (36.1)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	718 (27.4)	97 (21.2)	137 (25.4)	197 (35.2)	143 (26.2)	144 (27.5)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	445 (17.0)	61 (13.3)	97 (18.0)	93 (16.6)	121 (22.2)	73 (13.9)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317 (12.1)	57 (12.5)	75 (13.9)	54 (9.6)	73 (13.4)	58 (11.1)

V. 정책 실효성 확대 방안

- 여성가족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 및 법 집행 시행 관리감독 강화(51.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정책 모니터링 강화(17.6%)’, ‘홍보강화(15.2%)’의 순서로 제시됨.
- 1. 2순위가 모두 시행 상에서의 감독, 모니터링의 강화로 나타나 여성가족부가 소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 해 정책 집행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나 법을 통한 기반마련은 잘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이 낮은 수준이므로 잘 갖추어진 제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감독이 필요함.
- 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가족부의 핵심사업과 주요 추진 전략들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단위 : %)



[그림 15] 여성가족부 정책 실효성 확대 방안

- 정책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역시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정책 및 법 집행 시행 관리감독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2순위도 '관련 정책 모니터링 강화'로 동일함.

〈표 7〉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 성별

(단위 : 명(%))

	전체	여성	남성
홍보강화	399 (15.2)	189 (14.2)	210 (16.2)
정책 및 법 집행 시행 관리감독 강화	1,358 (51.7)	701 (52.8)	657 (50.7)
관련 정책 모니터링 강화	463 (17.6)	235 (17.7)	228 (17.6)
정책 발굴 확대	357 (13.6)	174 (13.1)	183 (14.1)
기타	48 (1.8)	29 (2.2)	19 (1.5)

- 20대 · 30대 · 40대까지는 1순위가 '정책 및 법 집행 시행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정책 모니터링 강화'였으나 50대와 60대 이상은 1순위가 '정책 및 법 집행 시행 관리감독 강화'로 같으나 2순위가 '홍보강화'로 조사됨.

〈표 8〉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 연령별

(단위 : 명(%))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홍보강화	399 (15.2)	68 (14.9)	101 (18.7)	56 (10.0)	96 (17.6)	78 (14.9)
정책 및 법 집행 시행 관리감독 강화	1,358 (51.7)	240 (52.5)	222 (41.2)	319 (57.0)	299 (54.9)	278 (53.1)
관련 정책 모니터링 강화	463 (17.6)	78 (17.1)	114 (21.2)	116 (20.7)	94 (17.2)	61 (11.6)
정책 발굴 확대	357 (13.6)	49 (10.7)	96 (17.8)	69 (12.3)	49 (9.0)	94 (17.9)
기 타	48 (1.8)	22 (4.8)	6 (1.1)	0 (0.0)	7 (1.3)	13 (2.5)

VI. 나가며

- 2017년 이후 가족 분야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이 본격 실시되면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내용물)와 매뉴얼(안내서)을 개발하고, 전문강사 200여 명을 양성해 교육을 지원함.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처음 문을 열고,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이 확대됨. 여성 ·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선도하도록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 됨.
-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전반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강화, 관리감독 강화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집필 : 이선민 부연구위원〉